

욕설·구타·인권침해...학생선수 폭력 피해 여전

교육부 전수조사서 드러난 실태

운동과 공부를 겸하는 지역 학생선수 4000여 명 중 상당수가 언어·신체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7~8월 전국 학생 선수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총 16개 학교에서 38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해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었으며 체육 지도자도 4명이나 있었다. 가해 학생 32명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넘겨 조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안 지도자에 대해서는 1명은 경징계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적발된 학교 밖 지도자 2명은 모니터링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는 잠재된 폭력피해를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회 정무장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 폭력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광주지역 학교 운동부에서도 잇따라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만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또 전남의 한 중학교가 운동부 코치의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폭행을 신고받고도 쉬쉬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코치는 상습적인 구타와 함께 밥을 굶기면서 운동을 시켰고, 지난해에는 한 학생이 훈련과정에서 발등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허술한 대처 속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광주·전남 16개교 학생 38명 피해...가해자는 학생·지도자 등 36명 상습폭행 신고 받고도 쉬쉬...전수조사 정례화·관리 대책 마련 절실

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만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 유형은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기타(사직) 2명 등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는 최근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내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다른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걸 막기로 했다. 가해 지도자의 징계 누적 관리, 다른 종목단체 재취업 금지 등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늘어나는 폭력과 인권침

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수 조사 정례화와 수시 관리, 감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은 "학생선수 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 따돌림, 성희롱, 부적절한 뒷돈 요구 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건 지도자가 선수를 소유물로 인식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적발된 문제 지도자와 가해학생을 엄중 처벌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보장 대책을 세워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계란판매점 위생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계란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광주시 북구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관내 한 계란판매점에서 위생상태 점검과 함께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1000억대 도박사이트 조직폭력배 2명 구속

대표통장 제공 등 27명도 적발

1000억원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표통장(제3자 명의 은행 계좌)을 개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광주지역 조폭 A(39)씨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표통장을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 등 전남지역 조폭 12명과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표통장 94개를 시중에 유통해 금융 단계를 범칙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게 계좌 당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좌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호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층을 타깃삼아 대표통장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각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병원 로비 흥기 난동 여성 검거

진도경찰은 16일 진도 한 병원 로비에서 흥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여·4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진도 모 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B(70)씨와 C(여·69)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미리 흥기를 가지고 병원을 찾은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양제철 설비공급회사 직원 2명

기술 유출 혐의 구속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자재를 공급하는 설비공급회사 직원들이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포스코와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측에 자재를 제공하는 설비공급회사 소속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술을 다른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어떤 기술을 어떻게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 이들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으나 포스코 측은 설비공급회사 직원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피병' 안 통한다

법원 "환자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입증 증거로 부족"

특별한 의상이 없는데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피병'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나 상해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유력한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상해진단서가 환자의 말만 듣고 발급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A씨(27)는 지난해 3월, 광주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109cc 오토바이를 몰다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1차로

로 진행하던 12인승 승합차와 충돌했다. 보험사는 당시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과 승합차 오른쪽 뒤 핸들(핸들-타이어 덮개 부분)이 부딪힌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140여만 원을 지급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7)씨와 동승자(21)는 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 차량 운전자·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지상))와 진로를 변경할 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과실이 없고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도로교통법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유는 1심보다 구체적이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급작스런 진로 변경이 아니고 차량이 흔들리거나 진로가 바뀔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서서히 가다 멈추는 등 급정거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을 짚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다음날 입원한 뒤 해열·진통·소염제 주사 처분을 거부한데다,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사고 당시 70~80세 가량 노인이 차량에 동승했음에도 입원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 이런 점을 들어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A씨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327조 2호)상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p>광안지점</p>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p> <p>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p> <p>동광주지점 264-4150</p>
----------------------------------	----------------------------------	----------------------------------	----------------------------------	----------------------------------	------------------------------------	------------------------------------